

# 한동훈 ‘특별감찰관 추천’ 재언급… 野, 김건희 특검법 ‘압박’

(대통령 친인척 비리 감시 역할)

與, 尹-韓 면담 후 ‘자중지란’ 거듭  
친한계, 원내지도부에 의원총회 요구  
민주당, 내달 본회의서 특검법 상정  
與, 이탈표로 심리적 분당사태 우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 이후 여당 내부의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자중지란(自中之亂·같은 편 사이에서 일어나는 혼란이나 난리)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에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한 가운데, 정부여당의 반목은 보수 진영을 공멸로 이끌 것이라는 우려가 더해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23일) 언급한 특별감찰관 추천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를 감시하는 역할로,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다만, 특별감찰관 추천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맞물려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해야 특별감찰관 후보도 추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도 5년 간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지 않은 점도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굳이 하는 않는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에 대해 “문재인 정권 내내 특별감찰관을 추진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 표리부동을 대단히 비판해 왔고, 국민들도 비판해 오셨다”며 “우리 정부가 출범한 지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도 아직 특별감찰관 추천과 임명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이걸 우리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나은 정치 세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특별감찰관의 실질적인 추천과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 측은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3대 요구(대통령실 인적 쇄신·공개 활동 중단·의혹 구명 협조)와 관련해 성과가 없자 특별감찰관 추천 카드를 꺼내며 대통령실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친윤(친윤석열)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한 대표가 그런 의견을 가질 수도 있지만, 공개적으로 표출하기 이전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동시키는 것은 당론”이라며 “당론을 변경하기 전에 투톱의 하나인 원내대표하고 상의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모여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친한계의 의원들은 원내지도부에 특별감찰관 문제를 논의할 의원총회 개최를 요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대화방에서 국정감사를 끝내놓고 의총을 열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사 범위가 확대된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고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을 위해 정해진 수순을 밟아 나가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더 커진다면 이탈표로 법안 재의결 저지선이 무너지고 심리적 분당 사태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친한(친한동훈)계 인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어떻게든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108명에 틈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틈을 보이는 것은 우리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다. 당원들은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국민의힘에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며 “지금은 문제를 만들 때가 아니라 하나씩 풀어갈 때”라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尹 “방산협력 위해 양국 전략 파트너십 강화” 한동훈 “‘상승경제 7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

### 韓-폴란드 정상회담

尹 “지나해 폴란드 방문 계기의 성과  
방산, 에너지, 첨단산업 협력 이행”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한국을 국빈 방문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인태(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연계돼 있고, 글로벌 복합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치 공유국가이자 유럽의 핵심 파트너인 폴란드와의 협력은 더욱 긴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다 대통령과 한-폴란드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다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2018년 이후 6년 만이다. 폴란드 정상이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 것은 11년 만이다. 한국과 폴란드는 올해 수교 35주년을 맞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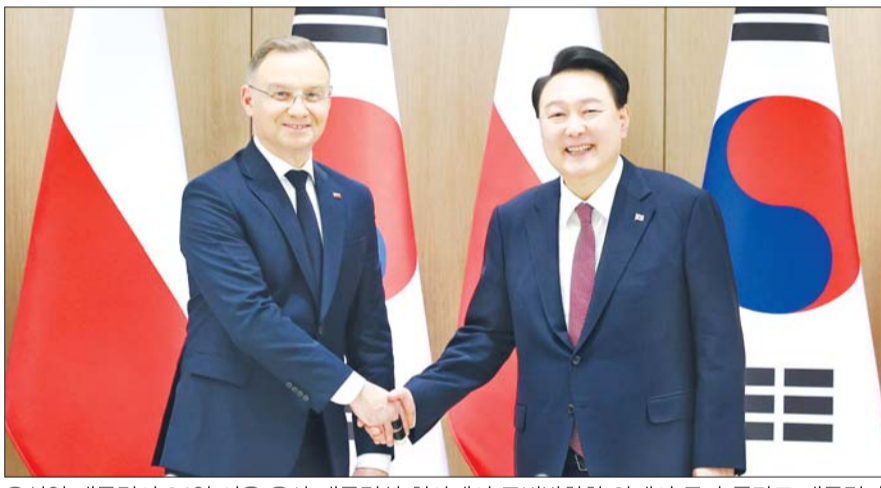
윤 대통령은 확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국과 폴란드는 성공적인 민주화와 경제발전의 역사를 공유하면서 1989년 수교 이래 다방면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2013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국방, 방산과 같은 전략 분야에서도 폭넓게 협력을 확대해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나해 저의 폴란드 방문 계기에 합의된 다양한 성과 사업들이 그동안 원활히 이행되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폴란드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국은 ▲방산 ▲에너지 ▲교통·인프라 ▲첨단산업 ▲과학기술 ▲문화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호혜적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특히 호혜적인 방산 협력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최고위급 공감대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수십조원어치 무기를 구매하고 있는 등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국이다.

양 정상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빈방한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한-폴란드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오늘날 한국은 폴란드의 제2위 투자국이며, 양국 간 교역은 6년 연속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우리 두 정상은 경제통상을 넘어 방산, 에너지, 첨단산업과 같은 전략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오늘 회담에서 두다 대통령님과 저는 그 후속 조치들이 착실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의 중인 ‘K2 전자2차 이행계약’을 포함하여, 한-폴란드 방산 협력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엄중한 국제 안보 정세를 감안해 양국은 국방·방산 당국 간 정례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또한 에너지·첨단산업 협력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에너지 안보와 첨단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다”면서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 생산 확대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나해 양국은 첨단 산업과 과학 기술 연구개발 협력 심화를 위해 다

양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러한 양해각서들의 착실한 이행을 독려하고, 정부와 민간 차원의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양국은 청정에너지, 배터리, 미래차, 자율로봇과 생명공학을 아우르는 첨단 기술 전략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과 두다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도발, 그리고 러시아와의 불법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 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한민국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양국은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두다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 폴란드와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우크라이나가 하루빨리 전쟁의 참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평화와 재건을 위한 지원 방안을 함께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 syj@

### 반도체·원전 사업 겨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반도체·원전 산업 등을 겨냥한 ‘상승경제 7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공지능(AI) 과학 혁명 시대가 도래했고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비중이 비약적으로 높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가 언급한 상승경제 7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통령 직속 반도체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촉진과 동시에 신기술의 효율적·안정적 규범 제시 ▲첨단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전력인

프라 구축 위한 제도 개선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하고 K-르네상스 시대 다시 여는 법안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현행 주식양도세 체계 유지 등에 대한 법안 ▲경제사회적 격차에 고통 받는 노동자를 위한 법안 ▲개발 및 발전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 균형 투자 촉진을 위한 법안이다.

한 대표는 “우리는 복지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 복지를 하기 위해서 경제를 우상향하겠다는 점이 민주당과 다른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승경제 7법을 반드시 통과할 것이다. 국민을 바라보면서 우상향을 위해서 가야할 길을 가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 세수결손에도… “반도체산업 지원해야”

### >> 1면 ‘중 반도체 굴기 가속…’서 계속

그러면서 “사실 미국 같이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주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 제일 좋은 방법인데, 문제는 정부가 돈(재정)이 없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난색을 표하니, 기업이 시설투자를 할 때 세율을 깎아준다거나, 혹은 그 기간을 늘려준다거나, 세액공제 한도를 높여준다거나 이러한 방식의 해법이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냐는 논리로 반도체 산업에 적극 지원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중”이라고 했다.

### ◆2년째 세수펄크에도, 할 일은 해야

여야는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다. 반도체 특별법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할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전력·용수 등 인프라에 대한 지원, 반도체 자금 조성, 인력

양성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여당에선 직접 보조금, 야당에선 대규모 정책 금융 지원 방안을 내놨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6일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데 이어 올해도 29조6000억원이 더 발생할 것이라고 봤다. 건정 재정 기초속에서 정부가 산업 지원에 쓸 여력이 더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도 할 일은 해야 한다는 산업계의 목소리는 절실하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지난 20일 국회가 주목해야 하는 23개의 법안을 건의하면서 첨단산업 투자 지원 강화를 위해 반도체특별법을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첨단산업이 우리경제를 이끌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글로벌 경제 패권경쟁의 성패를 결정할 것인 만큼 적극적인 투자 지원책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